'마스크 수업' 날씨가 추워지면서 광주·전남 일부 학교에서 학생들이 무더기로 신종플루에 감염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22일 화순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수업을 듣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학교 신종플루 급속 재확산

광주 어제 하루만 106명 … 광주 1·전남 3곳 휴교

교육당국 대책 부심

날씨가 추워지면서 광주·전남 일부 학교에서 학생들이 무더기로 신종플루에 감염되는 사례가 잇따라 각급 학교와 교육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광주의 경우 신종플루 집계 이후 처음으로 하루동안 발생한 학생 환자수가 100명을 넘어서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광주·전남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학교에서 10월 초만해도 하루 10명 미만에 불과했던 신종플루 발생 학생수가 지난 15일을 기점으로 급증하고 있다. 지난 14일까지 1일 평균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10명 정도씩 발생하던 신종플루 감염 학생수는 15일 27명, 16일 26명으로 늘어났고, 19일엔 83명, 20일 65명, 21일 71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2일에는 유치원 1개교 1명, 초등학교 4개교 33명, 중학교 5개교 26명, 고등학교 2개교 46명 등 모두 12개교 106명을 기록, 신종플루 집계 이후 처음으로 1일 감염 학생수가 100명을 넘어섰다.

전남지역 학교도 신종플루 감염 학생수가 급증하는 추세다.

10월 초 하루 2~3명씩 발생하던 신종플루 감염 학생수는 12일부터 10명 안팎으로 늘어난 뒤 19일 37명, 20일 61명, 21일 65명 등으로 급증했다. 22일에는 초등학교 10개교 35명, 중학교 1개교 12명, 고등학교 4개교 41명, 특수학교 1개교 3명 등 모두 16개교 91명이 확진 환자 판정을 받았다.

휴업학교도 늘어나 이날 현재 광주·전남에서 신종플루로 휴업에 들어간 학교는 광주 1개교, 전남 3개교 등 모두 4개교다.

시·도 교육청 관계자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일선 학교에 신종플루가 확산하는 추세이며, 상대적으로 위생관리가 취약한 학원 등에서 신종플루에 감염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면서 "조만간 학생들이 백신 접종을 받게 되면 우려를 한층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전까지는 학교별로 확산을 방지하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도 학교에서 지난주 두 명 이상 집단감염 사례가 356건이 발생, 이달 첫주(149건)와 둘째주(139건)보다 배 이상 증가했다. 신종플루 환자의 74.9%가 면역력이 약한 20세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학교에서의 신종플루 확산은 우려할만한 상황이라는 게 보건복지가족부의 설명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녹십자, 정부 말 믿었다 '낭패'

백신 원료 구매 수백억 손실

화순에 국내 유일의 백신 생산 공장을 운영 중인 녹십자가 정부의 구두 약속을 믿고 고가의 백신 원료를 구매했으나 정부가 납품 물량을 줄임에 따라 수백억원의 손실을 떠안을 상황에 처했다.

22일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향후 정부의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구매량은 1천716만~1천996만 도스(1회 접종량) 수준이다.

보건당국은 지난 여름까지만 하더라도 약 2천700만 도스의 백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접종 방식(성인 경우 2회에서 1회로 감소)이 변경됨에 따라 백신 구매량이 많게는 2천만 도스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로 인해 백신 공급량을 최대한 늘려달라는 보건당국의 요청에 따라 다국적제약사와 면역증강제 2천만 명분 구매계약을 체결한 녹십자는 백신을 만들어도 팔 수 없게 됐다.

녹십자는 정부 구매물량이 1천716만~1천996만 도스로 줄어듦에 따라 면역증강제 백신을 납품할 수 있는 양은 516만~796만 도스로 줄어들게 됐다.

이에 따라 녹십자측은 약 700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112는 통화중' 이유 있었다

행안위 국감, 시스템에 치명적 오류 확인

폭주 땐 '통화중'·신고자 전화번호 안 남아

경찰의 112 신고 전화가 통화중이거나 경우에 따라 신고자의 전화번호도 입력되지 않는다는 보도 〈광주일보 9월 28일자 6면〉와 관련, 112 신고 시스템 자체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장제원(한나라당) 의원이 22일 배포한 '112 신고 시스템 치명적 오류 발견'이라는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12 시스템에 통화량이 폭주할 경우 통화중 상태가 발생하거나 신고자의 전화번호가 남지 않는 등 시스템상 오류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심지어 일부 지역의 경우 112 시스템에 신고자가 아닌 다른 전화번호가 입력되는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의 경우 112 시스템 오류로 음주 운전자에게 폭행당한 30대 회사원의 신고전화가 2분이나 통화중 상태가 지속돼 경찰 출동이 지연됐다.

장 의원 측에 따르면 112 신고 전화가 폭주할 경우 뒤에 걸린 신고 전화에 대한 조치에 따라 3가지 유형의 신고 시스템이 운영중이며, 대부분의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 측은 통화가 폭주할 경우 112 시스템 구축업체에 따라 ▲먼저 걸려온 신고 접수 중에는 다른 요원에게 신고가 자동 배당되는 시스템 ▲먼저 걸려온 신고를 끊고 '접수완료' 버튼을 누르지 않고 다른 신고전화를 받으면 먼저 걸려온 신고자 번호가 남는 시스템 ▲먼저 걸려온 신고전화를 끊고 신고내용을 입력하던 중 뒤에 걸려온 신고를 받으면 먼저 접수한 신고내용이 삭제되는 시스템 등으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신고 자동배당 시스템'이 가장 합리적인 데도 광주경찰청 등 4곳의 지방경찰청에서는 완성도가 떨어지는 K사 시스템을 사용중"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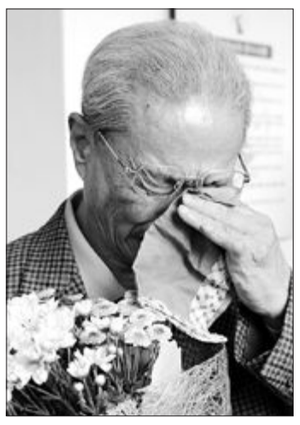
정 의원은 "광주와 부산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경찰은 근무자의 실수나 대부분의 시스템이 그렇다는 등의 궁색한 해명에만 급급할 뿐 시스템 보완이나 수리는 하지 않고 있다"며 "경찰이 자초한 치안 공백 사태를 시급히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이젠 사람답게 살아야죠"

29년 만에 '간첩' 멍에 벗은 김기삼씨

광주고법 무죄판결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소원을 이루는 데 꼬박 30년이 걸렸습니다."

22일 광주고법 301호 법정. 재판장이 29년 전 '간첩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자 법정에 서 있던 팔순 노인은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다. 지난 1980년 수사기관의 조작에 의해 간첩으로 몰린 김기삼(80)씨가 29년 만에 '간첩'의 멍에를 벗는 순간이었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장병우)는 이날 김씨에 대한 재심에서 "간첩 혐의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조서 내용을 모두 부인해 증거능력이 없는데도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것은 잘못"이라며 "당시 관행이란 수사기관의 주장도 있지만, 문명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불법 체포·감금된 상태서 수사한 것 자체를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병우 판사는 무죄 선고 직후 김씨에게 "40여년 전 일로 고초를 당한 기억을 잊고 여생을 평화롭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한다"며 국가와 법조계를 대신해 사과의 뜻을 표했다.

김씨는 "억울한 누명을 벗고 한국 사람으로 다시 살 수 있게 됐으니 소원풀이를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1980년 12월 한전 검침원으로 재직하던 중 안기부에 연행돼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월북한 사촌형을 만난 뒤 군사시설 등에 대한 검침을 통해 정보를 수집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사진=위직량기자 jrwi@

환경미화원 임금 소송 '봇물'…지자체 '골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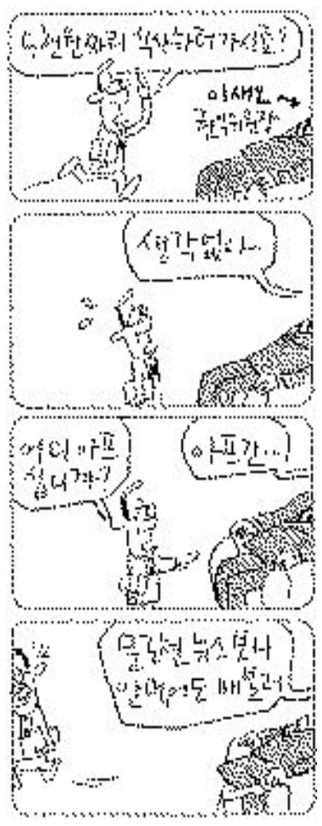
대법원이 지난 2007년 "환경미화원의 통상임금이 낮게 책정됐다"는 판결을 내놓은 이후 광주지역 미화원들이 청구한 임금 소송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 민사합의3부(부장판사 이용구)는 22일 나모(48)씨 등 전·현직 미화원 29명이 광주 동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동구는 원고 1인당 800여만~6천400여만원씩, 모두 4억9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또다른 미화원 56명이 광주 서구와 남구, 북구, 광산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1인당 수백만~수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소송은 대법원이 2007년 11월 '통상임금에서 정액급식비 등 4개 항목을 제외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놓은 뒤 미화원들이 잇따라 제기한 것으로, 지자체별 체불임금 지급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나원참 〈7934〉 김종두



'가짜 가족' 초청 뒷돈 베트남 여성 8명 검거

전남지방경찰청은 22일 베트남인들의 불법 입국을 도운 A(21)씨 등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 8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 등은 국내에 불법 입국하려는 베트남인들을 자신의 가족인 것처럼 속여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브로커에게 넘겨주는 대가로 300만~400만원을 받은 혐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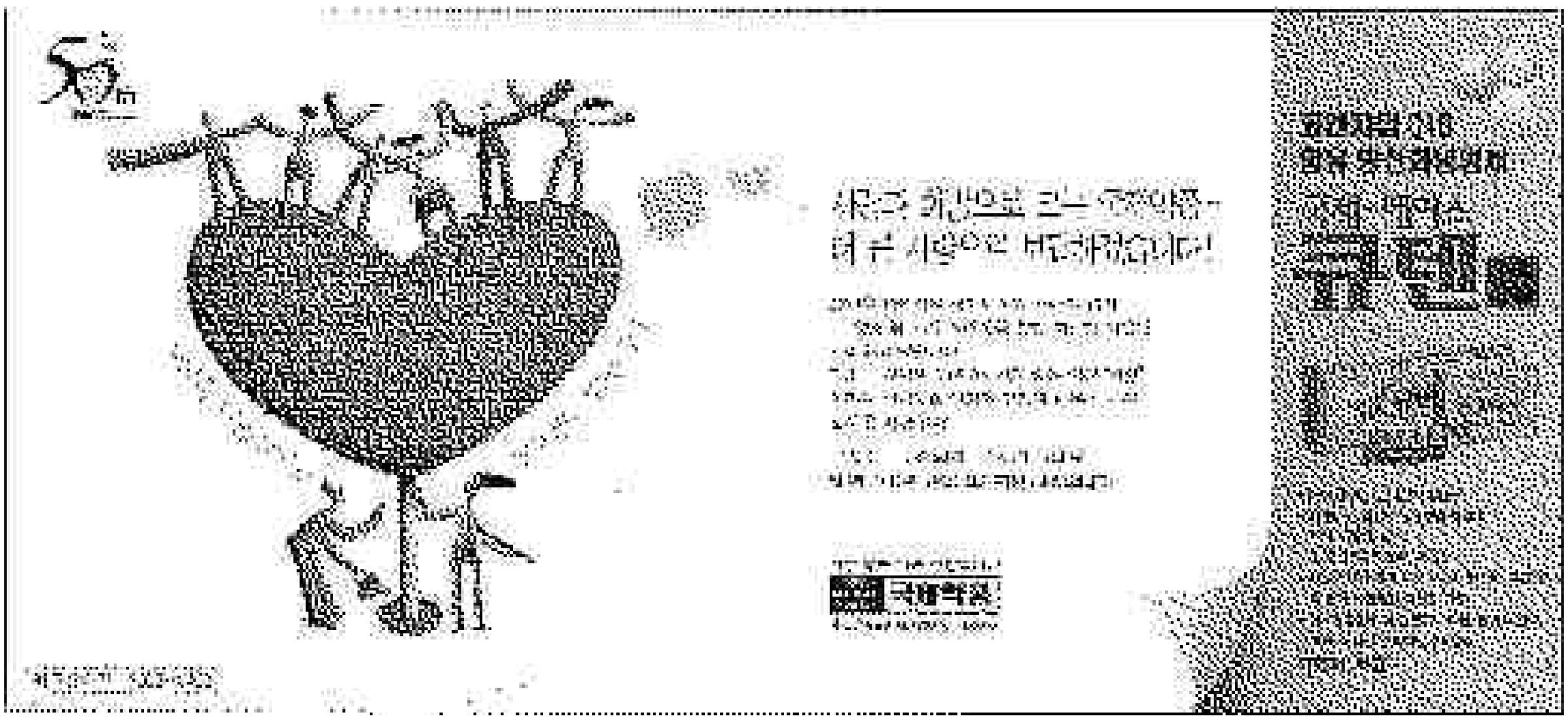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세상이 싫다" 무등산서 자살소동

쌍나팔

○…"세상이 싫다"며 무등산에 올라가 자살소동을 벌인 60대가 119 구조대와 한 등산객에 의해 무사히 구조.

○…22일 광주동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8시께 119 구조대에 "무등산에서 자살하려는 시민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는 것.

○…신고를 접수받은 광주동부소방서 구조대 등은 무등산 새인봉 정상에서 투신을 감행하려는 A(67)씨를 40대로 추정되는 등산객이 설득하는 장면을 목격, 20분 가까이 함께 설득해 무사히 하산시켰다는 것.

○…구조대 관계자는 "119에 신고하고 끝까지 A씨를 설득한 등산객 덕분에 무사히 구조할 수 있었다"고 설명.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